



지난 16일 열린 '2015 평화누리길 걷기행사 in 파주' 참가자들이 출발 신호와 함께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다.

/경기도 제공

### ‘평화누리길 걷기행사’ 전국 1천여명 발길

#### 참가자들 임진강 풍광 감탄

경기도와 파주시,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‘2015 평화누리길 걷기행사 in 파주’가 지난 16일 평화누리길 8코스 반구정길에서 열렸다.

‘임진강 따라 핀 꽃’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가족단위, 트레킹 동호회 등 전국에서 1천여명이 참석해 울곡습지공원을 가

득 매웠다.

이번 행사는 울곡습지공원을 출발, 생태탐방로와 장산전망대를 거쳐 화석정, 울곡습지공원까지 돌아오는 9.5km의 순환형 코스다.

참가자들은 40년만에 민간인에게 처음으로 개방된 1.2km의 생태탐방로를 걸어보고 손때 묻지 않은 임진강의 풍광에 감탄을 자아냈다.

또 평화누리길 홍보대사인 영화배우 조

재현씨가 출발 전 포토틀에서 참가자와 함께 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시간도 가졌다.

이밖에 참가자들은 10m씩 걸을 때 마다 1원씩 적립해 자연환경국민신탁에 기부하는 행사를 가졌다.

이날 기부된 약 100만원의 성금은 비무장지대 보전사업에 사용된다.

‘2015 평화누리길 걷기행사’는 파주에 이어 다음달 13일 고양시에서 연이어 열린다.

참가 신청은 18일부터 공식홈페이지([www.walkyourdmz.com](http://www.walkyourdmz.com))를 통해 선착순 1천명을 모집한다.

/이슬하기자 rachel@

17.8 X 13.4 cm

### 중부일보

#### 경기도 국비지원 요청 사업 및 금액

구분	사업명	금액(억원)	구분	사업명	금액(억원)
예산총괄분야	KTX 수원역 출발 조기추진(서정리역-지제역 연결)	120	경제예산분야	진접선(4호선 연장)복선전철 공사비	1천300
	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	504		임진강수계 농촌용수공급사업	300
	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	1천30		천왕-광명 광역도로사업 전액	1천480
	2016년 하천사업	2천96		가구공동전시판매장/물류센터 건립	27
	고덕(삼성), 진위2(LG) 산업단지 기반시설비	920		광역도로사업 ‘국비지원한도 제한’ 폐지	비예산
	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	1천312		국지도 국비지원 축소 철회 및 유보된 국비 교부	849
	광역도로사업 ‘국비지원한도 제한’ 폐지	비예산		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정비사업	10
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동과세	비예산	하남선(서울 상일~하남 검단산) 복선전철	1천324		
사회예산분야	장애인의료비 미지급액	18	행정예산분야	별내선(서울 암사~남양주 별내) 복선전철	865
	국공립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	61		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	110
	약취 끝! 도민행복 Project	25		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	410
	말라리아 박멸사업	15		경기도 재난안전종합체험관 건립	8
	석면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	59		광고 경기문화창조허브	20
	아동복지시설 운영 국고보조사업 환원	비예산			
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예산회계 전환	비예산				
			총 28개 사업		1조2천863

## 도, 내년 국비지원액 ‘1조2천863억’ 요청

### 국지도 보조율 100% 환원 등 비예산 부문 지침 변경 요구도

경기도는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1조2천863억원을 경기지역 현안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배정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.

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기재부 주관으로 열린 시·도지방재정협의회를 통해

경부선 서정리역~수도권고속철도 지제역 연결과 서울천왕~광명 광역도로 건설 등 경제분야 9건에 6천747억원의 지원을 건의했다.

★도표 참조

사회분야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과 슬레이트 지붕개량 등 8건에 1천490억원을, 행정분야는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과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10건에 4천626억원을 요청했다.

분야별로 건의한 사업 중에 KTX 수

원역 출발 등 중요 사업 8건을 총괄분야로 선정, 5천982억을 우선으로 내려 보낼 것도 요청했다.

경기도는 지방으로 넘겨진 아동복지 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(국비 70% 분담)으로 환원해 줄 것과 국가지원지방도 공사비 국비보조율을 100%에서 사업별로 70~90%로 축소할 지침을 철회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.

양진영기자

17.4 X 14.7 cm

